

2017
ISSUE
BRIEFING

전북연구원이슈브리핑

2017.2.28 vol.157

문화도시의
법적지정을 준비하자

장세길_ 문화관광연구부 연구위원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17년 2월 28일 vol.157 발행인_강현직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귀팔취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문화도시의 법적지정을 준비하자

- 1.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황
 - (1) 지역거점 문화도시 04
 - (2) 문화특화지역 04
 - (3) 전라북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황 05
- 2. 문화도시 법적지정 전망
 - (1)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도시 지정 조항 07
 - (2) 새정부 추진목표로 문화도시 법적지정 준비 07
 - (3) 법적지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08
- 3. 전라북도 지정추진 대응방안
 - (1) 전라북도의 대응 10
 - (2) 지역거점 문화도시(전주)의 대응 11
 - (3) 문화특화지역의 대응 12
 - (4)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 대응 13

문화도시의 법적지정을 준비하자

| 요약 |

□ 새정부 추진목표로 문화도시 법적지정 준비

- (추진시기) 2017년 내에 법적지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
- (지정대상) 광역도를 제외한 지자체(광역시, 시·군·구) 예산지원이 뒤따르는 법적지정 대상은 229개 시·군·구로 한정될 전망
- (지정목표) 10년 동안 최대 50개 내외의 도시를 지정(구상안)
- (지원내용) 지역별로 5년 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구상안)
- (지정절차) 최소 3년이 소요(1년차 계획수립과 지정신청, 2년차 계획심의·승인, 3년차 예비사업 실행과 지정)

[그림 1] 문화도시 법적 지정 절차와 진행과정별 지자체 준비 내용



□ 전라북도의 지정추진 대응방안

- (전라북도) 시군 단위의 전략을 도 전략으로 확대하여 도 자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 시군 공무원 및 관계자의 교육과 역량강화 추진, 광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
- (지역거점 문화도시-전주) 국제 수준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통문화도시 수정계획 또는 신규 조성계획을 수립, 기존 사업의 계승 차원에서 제도(조례)와 체계(거버넌스) 구축 또는 정비, 한중일 공동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재추진
- (문화특화지역-남원·군산·익산) 문화도시 법적지정에 부합하는 조성계획 수립 및 기존 계획의 수정·보완,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도시문화의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의 선정과 실행, 기초 단위의 제도(조례)와 체계(거버넌스) 구축
- (신규추진 희망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문화 필요(문화도시 추진과 지역브랜드의 동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도시문화브랜드를 발굴, 2018년 문화특화지역 지정 공모사업(2017년 공모예정) 참여 (문화특화지역 사업계획 수립)

1.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황

(1) 지역거점 문화도시

-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유럽문화수도'를 참조한 참여정부의 문화적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었음. 중앙정부 주도형 1개소(광주)와 지역중심-중앙지원형 4개소(전주-전통문화, 부산-영상문화, 경주-역사문화, 공주-부여-역사문화)가 추진됨

[표 1]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광주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	경주 역사 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사업유형	중앙주도형	지역중심-중앙지원형			
사업기간	2004년~2023 (20년)	2007년~2026 (20년)	2004년~2011 (8년)	2006년~2035 (30년)	2009년~2030 (22년)
총사업비 (계획안)	5,200억원	17,109억원	1,600억원	33,533억원	12,000억원
추진현황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의 7대 권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	전주 한옥마을 중심.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15년 약 956만 명 관광객 방문	영화의전당 건립. 아시아영화 허브도시로서 위상, 장소성 갖추는 사업	월정교 복원사업 추진. 유적지 경관조명. 교촌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유적의 정비·복원. 도시경관 및 테마거리 백제유적관람환경 개선

-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러 성과를 거둠.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 전통문화도시(2007~2026)임.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1,000만 가까운 관광객이 전주한옥마을을 찾음¹⁾. 다른 조성사업 역시 대규모 예산투입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 성과가 나타남
- 하지만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적지 않음. 문화도시를 추진하거나 추진하려는 지역마다 문화도시를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고, 법적근거 또한 미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지나치게 하드웨어 건립에 집중한 나머지 인적기반과 콘텐츠·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음

(2) 문화특화지역²⁾

- 현 정부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함. 그런데 기존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처럼 대규모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고, 하드웨어 중심의 조성사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도시의 예비단계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함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은 2014년부터 추진됨
 - 사업목적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자체를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의 격차를 해소
 - 지원기간 : 본 사업 기간 5년 + 추가 지원 2년
 - 지원예산 : 연 7억5천만원(국비 3억원+지방비 4억5천만원)
 - 예산구성 : 휴먼웨어 30% + 소프트웨어 30~40% + 하드웨어 최대 40% 이내
 - 지원대상 : 광역시(광역시 제외), 시·군·구 단위 도시

1) 2015년 행정자치부와 공동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약 956만명이 한 해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2) 조광호(2016), "문화도시 10년, 그리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제언 -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구상과 현황을 중심으로."참조

-사업내용 : 문화거버넌스의 도시문화활성화 사업,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사업, 휴먼웨어 구축을 통한 문화일자리 창출 가능 사업, 도시 문화장소 구축을 위한 리노베이션(장소재생)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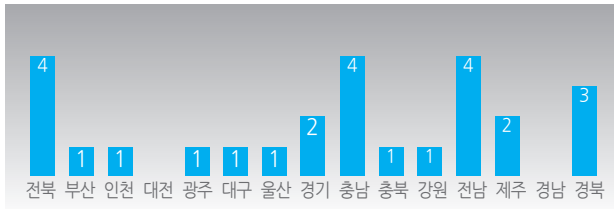
[표 2]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 추진현황

연도	지자체명		내용	총사업비(백만원)		
	광역시	기초		국비	지방비	계
2014년	전북	남원시	예술문화도시	1,500	2,250	3,750
2015년	대구	본청	공연예술문화도시	1,558	2,337	3,895
	충남	천안시	독립예술문화도시	1,500	2,250	3,750
	전북	군산시	예술문화도시	600	900	1,500
	전남	여수시	거리공연문화도시	1,932	2,898	4,830
	경북	구미시	산업문화도시	1,500	2,250	3,750
	제주	서귀포	생태예술문화도시	1,500	2,250	3,750
2016년	인천	부평구	음악·융합도시	1,500	2,250	3,750
	제주	제주시	'별의 도시, 제주'	1,500	2,250	3,750
	경기	가평군	커뮤니티 연극활성화	1,500	2,250	3,750
	강원	원주시	그림책 도시	1,500	2,250	3,750
	충북	청주시	문화적 도시재생	1,500	2,250	3,750
	충남	서산시	문화예술 발신도시	1,500	2,250	3,750
	전남	나주시	문화경작도시, 나주	1,500	2,250	3,750
	전남	담양군	생태문화도시	1,500	2,250	3,750
	경북	포항시	융복합형 문화산업도시	1,600	2,400	4,000
	경기	부천시	시민문화도시	1,750	2,250	4,000
2017년	울산	중구	종갓집 문화도시	1,500	2,250	3,750
	전북	익산시	역사문화도시	1,500	2,250	3,750
	전남	광양시	철강문화도시	1,500	2,250	3,750

(3) 전라북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황

- 지역거점 문화도시에 전주시가 전통문화 유형으로 선정됐으며, 2007년부터 2026년까지 1조7천여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됨. 사업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투입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2,000억원 규모임
- 문화특화지역은 남원시가 2014년 최초이자 그해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2015년에 군산시가, 2017년에 익산시가 추가로 선정됨
 - 남원시는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 군산시는 근대문화도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달리 시민예술촌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됨
 - 익산시는 마한·백제역사에 예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전략(역사+)을 수립함

[그림 2] 광역시도별 문화도시·문화특화지역 지정 현황



※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역거점 문화도시(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는 공주와 부여로 구분하여 숫자에 포함), 문화특화지역(광역시, 시·군·구)을 포함(서울은 제외)

[표 3] 전라북도 문화특화지역별 추진계획

지역	사업방향	사업부문	추진계획
남원 (2014 선정)	도시문화 경영	문화경영	· 문화도시 사업추진단 및 도시문화센터구성·운영 · 도시문화 비전 2020 연구/ 도시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문화관리	· 남원 도시문화포럼/ 남원하루(문화정보알림서비스) · 도시문화 브랜드 관리·마케팅
	도시문화 활성화	문화역량강화	· 문화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도시문화아카데미(참여형) · 남원생활문화 제안 공모사업/ 청소년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문화향유지원	· 문화시민 인증제도/ 문화관광자원 패키지사업
	도시문화 개발	문화아카이빙	· 아카이브 구축사업(남원도시메모리즈)/ 용성지 복원사업
		문화융합	· 문화융합프로젝트/ 스몰비즈니스 지원사업
	도시문화 연결	문화네트워킹	· 광한루 상설공연프로그램/ 문화역사재조명 학술대회 · 남원 문화기획 프로그램 지원/ 남원문화버스
		문화축제	· 남원 문화의날(춘향제 연계)/ 도시문화 [판]페스티벌
	도시문화 장소	장소가치재창조	· 문화역 남원 재창조 프로젝트
		장소디자인	· 남원 문화루 12디자인
군산 (2015 선정)	시민 예술촌 프로그램 운영 (문화야~ 예술야~ 노오울자~)	4대 공감 프로그램	· 세대공감 : ‘작은 공감영화제(가)’, 스마트 디바이스 영상제작 프로그램, 찾아가는 미디어프로그램 등 · 문화공감 : 다문화가정이 기획하는 영화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획, 비주류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 등 · 시대공감 : 역사체험 교육 프로그램, · 도심공감 : 신도심과 원도심 비동류 문화예술 커뮤니티 연결 프로젝트,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제공	· 시네마클럽 운영/ 문화예술 관련 각종 포럼 · 아트 커뮤니티/ 문화예술 만남의 광장 · 문화예술 체험교육 운영(유치원 현장학습, 주부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등)
		지역밀착 문화 생활 프로그램	· 골목 투어 : 원도심 투어를 단편영상상영회와 결합시켜 야간 원도심 문화 구현
		여성인권	· 꽃순이를 아시나요/ 여성인권독립영화제 · 여성인권 전국 백일장 및 인권 세미나
익산 (2017 선정)	역사+	연구&교육	· 익산왕도미래유산센터/ 고도익산 디지털라이브러리 · 역사· 예술 감성교육/ 역사문화 생활클럽(커뮤니티) · 익산 아카이브 王都人
		예술&기술	· 청년 역사 “꾼”고도 LAB/ 고도셰프 소셜다이닝 · 하이랜드 프리마켓 & 프린지 · 익산 국제 고도영화제(역사문화 복합페스티벌)
		도시&자연	· 라이브 고도 미디어월/ 왕도정원 가꾸기 사업 · 역사놀이터 만들기 사업/ 역사고도 문화마라톤 대회

2. 문화도시 법적지정 전망

(1)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도시 지정 조항

[표 4]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항

장	주요내용
제4장 문화도시·문화 지구의 지정 및 지원	<p>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p> <p>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2) 새정부 추진목표로 문화도시 법적지정 준비

- (추진시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10년을 맞이하여 지난해부터 문화도시 법적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음. 초기대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지정 프로세스는 2017년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지정대상)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제외한 4개 지역거점 문화도시와 20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그리고 문화특화지역은 아니지만 문화도시 법적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까지 포함됨. 즉 특별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는 광주시와 광역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시, 시·군·구)가 대상임
 - 광역시는 지정대상에 포함되나 국비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실제 국비지원이 뒤따르는 문화도시 법적지정 대상은 229개 시·군·구가 될 것임
 - 지역거점 문화도시와 문화특화지역이 우선 지정대상이나, 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도 지정 신청이 가능함. 다만 심의단계에서 문화특화지역 보다 세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지정목표) 10년 동안 최대 50개 내외의 도시를 지정할 것으로 보임
- (지원내용) 지역별로 5년 간 최대 200억원(미확정)을 지원하는 안이 논의 중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중임

- (지정유형) 지정유형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지역브랜드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지역별 특화 유형은 유효할 것으로 보임. 지정분야는 「지역문화진흥법」 외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 지역문화 관련 법률의 분야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 역사, 전통문화, 문화산업, 사회문화, 인문 등 포괄적 분야 외에,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건축·만화·게임·영상·광고·디자인·생태 등 지역별 문화브랜드까지 인정함
- (지정절차)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문화도시 심의·지정 기간이 2년이지만, 실제 과정은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 1년차는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신청 단계이며, 2년차는 조성계획 검토와 심의단계, 3년차는 예비사업 실행과 지정 단계임
 - 법적지정 이후 사업중간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안이 구상되고 있음.

[표 5] 문화특화지역사업과 법적 지정에 의한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의 비교

구분	문화특화지역 사업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
사업개념	문화도시 지정 예비단계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법적지정 및 도시문화 활성화
사업시점	문화도시 지정 이전 예비시점		문화도시 지정 이후 활성화 시점
사업규모	5년간 최대 37.5억원		5년간 최대 200억원 (구상안)
사업내용	도시의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도시 가치를 발현하고 문화도시 조성의 기반구조를 정립		문화도시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 및 사회효과를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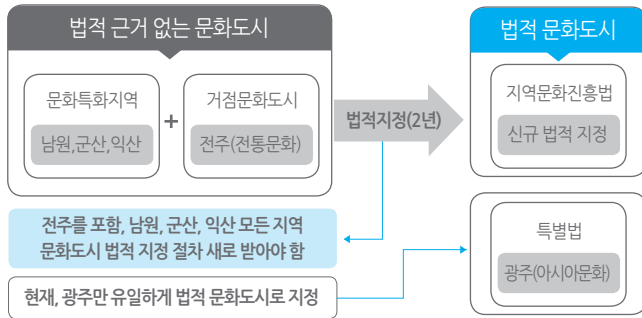
(3) 법적지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 법적지정은 빠르면 2017년에 추진돼 2018년부터 프로세스를 밟을 것으로 보임. 2017년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법적지정의 선제적 대응을 좌우할 것임
- 현재 구상되고 있는 문화도시 법적지정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최대 50개 내외에서 법적지정을 할 것으로 보임
 - 2017년 현재 지역거점 문화도시가 4개소, 문화특화지역이 20개소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법적지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법적지정과 별도로 예비단계 성격의 문화특화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문화특화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법적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앞서야만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음
 - 특히 연차별로 5개 내외로 지정되므로 지정이 늘어질 경우 예산지원이 10년 뒤어나 이뤄지기 때문에 구상했던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그림 3] 문화도시 법적 지정 절차와 진행과정별 지자체 준비 내용



- ‘문화도시’로 불리는 전주 역시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문화도시 법적지정을 받아야 함. 즉 전라북도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심의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 예비단계에서의 추진실적등이 될 것임
- 첫째, 거버넌스는 사업계획서만 존재하는 형식적 체계가 아니라 실제 운영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를 말함.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등이 심의과정에서 점검될 것임
 - 협의체는 시군 단위 추진협의체(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와 광역 단위 추진협의체(도시추진체, 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 참여)가 요구됨
 - 협의체에 참여하는 분야는 문화영역만이 아니라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예, 도시계획, 환경, 관광, 여성, 농업농촌 등)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추진하려는 도시브랜드 유형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해야 함
- 둘째, 예비단계의 추진실적은 정부가 제시하는 문화도시의 추진방향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임
 - 하드웨어 조성이나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고유한 도시문화가 주민에 의해 진흥되고, 이를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도시문화 생태계의 구축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3. 전라북도 지정추진 대응방안

(1) 전라북도의 대응

① 시군 전략에서 전라북도 전략으로 채택

- 지금까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시군의 도시발전전략으로 추진되었고 전라북도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였음. 법적지정을 계기로 '한국 속의 한국 전라북도'를 실현하는 전라북도의 문화적 도시재생전략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음
- 법적지정 대상에 광역도는 제외되어 있으나, 전라북도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 타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를 연계한다면 전라북도 차원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될 수 있음

② 문화도시의 인식 제고 : 시군 관계자 교육

- 시군에서 바라보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임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자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에 선정되면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지특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관심이 적어짐
- 문화도시는 국가예산 확보수단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여 문화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이러한 이해가 부족하면 향후 추진되는 문화도시 법적지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
-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관계자(공무원, 문화기획자, 관련전문가 등)에게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함
 - 문화도시 지정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기획하는 연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워크숍을 개최함

③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구축

-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주체가 광역시, 시·군·구이지만, 광역도의 협의체 운영과 지원내용도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국가지원 방식이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절반 이상의 지역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전주, 남원, 군산, 익산 이외에 2~3개의 지자체에서 문화특화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들 지자체가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14개 시군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지역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나섬
- 광역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전라북도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법적지정을

지원하는 TF를 구성하고 지원해야 함. 이 조직이나 TF는 향후 지정절차에서 요구되는 광역협의체로 전환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 또는 네트워크는 시군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조직임. 문화적 도시재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중간지원조직 또는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될 수 있음

(2) 지역거점 문화도시(전주)의 대응

① 국제적 문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수정계획 필요

○ 기존의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을 고집하여 국가예산을 요청하기보다 달라진 환경에 맞춰 전통문화도시 수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는 전주의 미래비전과 연동하여 새로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기존의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은 하드웨어 중심이었음. 향후 법적으로 지정되는 문화도시는 휴먼웨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계획이 필요함

○ 전주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전주가 지향하는 '아시아문화심장터'에 부합하는 문화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함

- 전주 전통문화도시와 관련된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와 이를 실행할 글로벌 협의체가 필요함. 또한 독자적인 글로벌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② 기존 사업의 계승 차원에서 제도와 체계 정비

○ 전주 전통문화도시추진단은 문화도시협의체의 대표적인 거버넌스이었음. 글로벌을 지향하는 새로운 수정계획에 부합하는 추진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함

- 전라북도 차원의 광역 추진협의체의 일환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문화도시 만형으로서 전라북도 문화도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함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성과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문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삼은 전통문화도시 관련 조례 또한 시급하게 제정해야 함

③ 한중일 공동 지정,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추진

○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2014년부터 지정하고 있음(2014년 광주, 2015년 청주, 2016년 제주). '아시아문화심장터'를 도시비전으로 세운만큼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함

- 전주시는 첫 지정공모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신 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

○ 아시아에서 근대민주주의를 최초로 실현한 지역(집강소 설치)으로서 아시아의 시민혁명, 저항문화 등을 총괄하는 새로운 아시아 문화네트워크를 새롭게 설립하여 전주시가 주도할 수도 있을 것임

(3) 문화특화지역의 대응

① 문화도시 법적지정에 부합하는 계획 보완

- 남원과 익산은 문화도시전략을 기반으로 도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문화특화지역에 선정됨. 문화도시의 법적지정을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근간으로 지정프로세스에 맞춰 계획의 수정과 보완이 요구됨
 - 남원의 문화특화지역 사업계획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2014년 계획을 수립했음.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받아 지역브랜드 차원의 특화전략을 보강해야 함. 익산은 역사문화도시 종합계획을 활용하여 문화도시 법적지정과 관련한 조성계획으로 전환시켜야 함
- 군산시는 특정사업(시민예술촌)을 추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문화특화지역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추진 중임. 군산시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도시 계획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함
 - '시간여행'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며 근대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도시전략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의 시민예술촌 운영활성화 차원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함

[표 6] 전라북도 문화특화지역의 문화도시 법적지정 추진 시 검토사항

지역	문화도시 법적지정 추진 이전의 보완 및 검토사항
남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는 전주가 선점하고 있으며,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테마 설정이 필요한데, 소리문화를 핵심테마(전주의 핵심테마는 음식)로 설정한 것은 타당해보임. 전통문화와 관련한 전주와의 연계방안, 인근지역으로 문화도시 성과 확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 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성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으로 도시가 재생되는 것이 기본이나 이를 통해 얻어지는 성과(예, 일자리, 관광효과, 구도심 활성화 등)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전략이 요구됨
군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제출된 문화특화지역 사업계획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략이라고 보기 어려움. • 도시의 재생전략은 '시간여행'을 테마로 가고 있으나, 문화특화지역 계획은 시민예술촌 조성 과 시민예술촌을 매개로 하는 생활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문화특화지역만 놓고 보면 군산시 전체를 문화적으로 특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을 둘러싼 생활문화진흥 프로그램에 그침. '시간여행'이라는 군산의 도시브랜드와 연계되는 특화전략이 새롭게 구성되고 이를 실천하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문화도시추진협의체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 문화특화지역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협의체는 군산대산학협력단(연구진으로 보임)을 중심으로 일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준임. 군산의 문화도시 테마에 부합하는 민·관·학 관계자와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군산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문화도시 협의체가 새롭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함
익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도시는 거점형인 경주, 공주·부여, 기타 지역이 많음. 이들 지역과 차별화가 필요함. 특히 공주·부여가 백제문화를 특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역사문화도시의 결과물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결과이고,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익산시민의 역사문화 향유와 주민 주도의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이 뒤따라야 함 • 다른 지역에 비해 후발주자인만큼 주민 협의체 구축과 운영, 기획사업 실행이 뒤쳐져 있음.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주민주도의 협의체 구성과 실제 생활 속에서 익산시민이 역사문화를 향유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가 필요함

②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선정과 실행

- 법적지정에서 중요한 심의기준 중 하나가 지정신청 이후부터 심의까지 예비사업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문화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는가임. 즉 문화특화지역 사업 중에서 선도 예비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해야 함
 - 예비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특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문화도시의 가치(문화적 도시재생, 거버넌스, 지속성 등)를 짧은 기간 안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함. 하지만 행사성 사업, 하드웨어 조성사업, 타 지역과 중복되는 사업 등은 배제해야 함
- 예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임. 도시단위 추진협의체에 의해 기획·운영되어야 하며, 지속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함

③ 문화도시에 부합하는 제도와 체계 구축

- 문화도시 법적지정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함. 도시단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지역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민 동의를 위한 설명회, 지자체·추진협의체·관련기관 등의 교육 등이 필요함

(4)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 대응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론화 필요

- 문화도시의 주민 주도의 중장기적 도시전략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국가예산사업으로 이해하거나 관광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동의를 위한 공론화가 제외되곤 함
 - 예를 들어, 지자체는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나 주민은 전통에서 벗어난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을 희망한다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어려움
- 문화관광 분야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농업농촌, 시민사회 분야에서 동의하여 협력적인 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공론화가 요구됨

②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의 고유 문화브랜드를 발굴

- 문화도시 법적지정 논의에 따르면 특정 유형(예, 미술)을 선정하는 것이 지정에 절대적 기준을 차지하지는 않으며, 다른 지역과 중복되더라도 지정이 가능함. 하지만 문화도시의 대표성, 지역브랜드 경쟁력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며 경쟁력이 높은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브랜드는 브랜드 리얼리티(Brand Reality),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의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춘 자원, 다른 지역과 중복되더라도 지역의 정체성으로 불리는 자원,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발전상, 결과물인 관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도시의 유형과 지역브랜드를 선정해야 함

[표 7] 신규 문화특화지역 추진 시 지역별 특화자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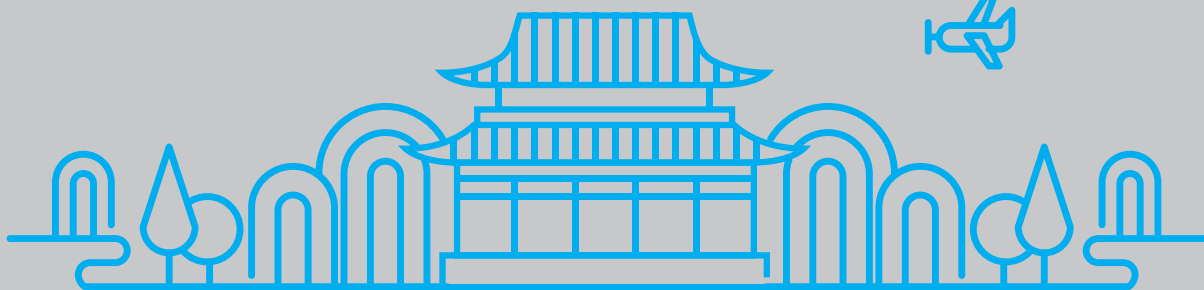
지역	특화자원	비고
경읍시	정신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도 절의문화의 중심: 안동 일대의 선비정신문화와 다른 절의문화 동학농민혁명 도시라는 브랜드보다 시·공간을 확대하여 근현대사의 절의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중심)으로 조성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인문정신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계획을 참조하여 정신(절의)문화를 특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완주군	예술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주는 도립미술관이 있으며, 전북도가 추진한 레지던시가 조성되어 있으며, 전주의 예술인이 대거 이주하여 예술인마을을 형성. 삼례예술촌 등 지역브랜드가 상당수 형성 완주의 특성을 살려 미술을 특화하거나, 어린이 예술로 특화할 수 있을 것임 전문예술, 생활문화, 아동예술교육, 노인예술치유, 각종대회·행사(예, 비엔날레) 등을 구상
무주군	건축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군은 고(故)정기용 건축프로젝트의 도시: 20년 전에 정기용 건축가의 생활밀착형 건축물(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30개가 건립되어 활용 정기용 건축사의 건축물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에 맞췄다는 점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중요한 건축자산 (현재 정기용 건축기행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 일반인보다 건축 관계자에게 유명) 1000원 목욕탕의 원조: 동사무소에 조성된 남녀 격일제 사용 작은목욕탕
임실군	무형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악, 한지 등 무형문화재부터 율놀이 등의 전통놀이까지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으며 마을공동체에 의해 전승되는 대표 지역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일생의례, 전통놀이 등이 생활화되고, 현대화되어, 관광자원화되는 대표지역으로서 무형문화 중심도시를 조성

※ 이외의 지역에서도 특화된 자원 활용이 가능: 김제시는 다종교 화합을 강조하여 한국영성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순창군은 발효음식을 특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문화도시로 특화가 가능

③ 2018년 문화특화지역 지정 공모사업 참여

- 문화도시를 염두에 두고 문화특화지역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 사업계획에는 '시민제안 및 공모형 문화활동 사업', '문화기획 프로그램', '도시문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시 문화허브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 창의인재 육성사업', '도시재생 및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성화 사업',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경제 활성화 사업', '도시의 문화브랜드 및 마케팅 구축.관리사업' 등이 필요함
-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실행을 주도할 실질적인 거버넌스(추진협의체)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 이러한 기본을 갖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2017년 공모사업에 참여함

문화도시의
법적지정을
준비하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